

Vol. **106**

2023년 6월
해양환경

IMO 국제해사 정책동향

IMO 국제해사 정책동향은 해양환경, 해사법률, 해사정책, 해사안전, 전략계획 등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발간물로,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(www.kmi.re.kr)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- 총 괄 박한선 실장
- 감 수 이연경 연구위원
- 발행인 김종덕 원장
- 발행처 물류·해사산업연구본부
해사산업연구실
-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
301번길 26(동삼동)
- T E L . 051-797-4800
- F A X . 051-797-4810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IMO의 국제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

■ IMO, 제80차 MEPC 회의를 앞두고 제15차 ISWG-GHG 개최

- 제15차 ISWG-GHG에서 제80차 MEPC에서 논의/채택될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개정 내용^{a)}이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IMO에서 논의됨
-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의 의욕 수준 개정과 2050년 도래 전 중간점검 지표 설정에 대한 고려와 중기 조치 설정임
- ▶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욕 수준(Level of Ambition) 및 중간점검 지표(Indicative checkpoint) 논의
 - IMO는 2018년 초기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에서 국제해운에서 발생하는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하여 2050년까지 50% 감축하는 의욕 수준을 설정하였음
 - 2050년까지 50% 감축이라는 목표를 상향하여, 2050년경까지 순 배출량 '0'(Net-Zero)의 달성을 목표로 함
 - 2050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 및 2040년으로 하여금 중간목표를 설정하여, 2050년의 순 배출량 '0'의 실현을 구체화함
 - 온실가스 감축량 측면에서 2030년까지 미국, 마셜 아일랜드/군소도서국은 전과정 관점에서 GHG 배출량 37% 감축을 주장했고, 호주 30% 감축, EU 29% 감축을 주장하였음
 - 저/무탄소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EU는 2030년까지 저/무탄소 에너지의 사용률을 최소 9% 전환 목표를 주장하였고,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최소 5%를 목표로 주장하였음
 - 이와 관련하여 제15차 ISWG-GHG에서는 2030년까지 국제해운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총량의 최소 5%를 저/무탄소 기술 또는 연료로 전환하고 10%까지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합의함
 - 2040년의 중간목표치로 대한민국은 전과정 관점에서 GHG 배출량을 80%, EU는 83%, 미/영/캐 및 마셜 아일랜드 등 군소도서국 96%, 일본/호주 50% 감축을 주장하였음
 - 2050년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2008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비하여 2030년까지 최소 20%(30%까지 노력), 2040년까지 최소 70%(80%까지 노력) 감축을 목표로 설정함

▶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중기 조치(Mid-term Measure) 논의 내용

- 지난 MEPC 및 ISWG-GHG 회의에서 IMO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중기조치에 대해 거론된 방안은 기술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가 논의되었고, 기술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를 결합한 결합조치가 주된 논의 내용이었음
- 대한민국과 대부분의 회원국은 기술적 요소로서 GFS(Global Fuel Standard, 연료유 표준제도)를 지지했고, 중기조치로서 거의 확정적임
- 다만, 몇몇 회원국은 GFS의 추가 개발의 필요성과 국가별 대응 수준 및 준비수준을 고려하여 유연한 적용이 가능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장됨
- 경제적 조치로서 Levy, ETS, feebate 등이 제시되었으며, 현 시점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선정하기 전에 종합영향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임
- 대한민국은 기술적 조치로서 GFS 경제적 조치로서 Levy를 결합한 형태의 조치 채택을 주장하였음^{b)}
- 대한민국을 비롯한 유럽국가와 군소도서국은 MEPC 80차부터 종합영향평가를 착수할 수 있으며, 종합영향평가의 2025년 채택, 2027년 발효를 주장함
- 또한, 중국, 아르헨티나, 쿡 아일랜드, 브라질, 페루와 몇몇 개도국은 가장 채택에 가까운 우선순위 후보 조치에 대하여 채택 이전에 종합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주장함
- 영국, 이탈리아, 호주, 독일 등의 유럽국가와 일본은 종합영향평가와 중기조치 개발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, 모든 중기 후보 조치를 대상으로 종합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

〈IMO 중장기조치 작업계획〉

- 1단계 : 2021년 봄~2022년 봄, 회원국들의 중장기조치 제안을 식별하고 목록화 작업
- 2단계 : 2022년 봄~2023년 봄, 제안·식별된 조치 중 후보조치의 식별
- 3단계 : 식별된 후보 조치에 대하여 국가별, 상황별 영향평가, 협약이행체계의 논의/채택 및 이행일정 수립

〈그림1〉 제15차 ISWG-GHG 회의 현장 발언 모습



자료 : IMO, 저자 작성(현장 참석)

IMO와 회원국,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이 가장 중요해

▶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내포해야 하는 개념은 정의로운 전환

- 국제해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또는 각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기반이 되어야함
- 또한, 선박 기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새로운 장비, 선박의 리트로핏, 연료의 전환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동반됨
- 선진국과 개도국은 경제적, 정책적, 기술적으로 극명한 차이가 있음
- IMO 온실가스 감축 중기 후보조치는 경제적 조치가 포함된 형태이기 때문에 조치가 발효될 시 개도국에게 치명적인 패널티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
- 기술적, 경제적으로 기반이 안정적인 국가는 선박기인 탄소배출로 인한 부담금(탄소세 등)을 활용하여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, 기술적,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
-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 및 장비의 개발·연구, 정책 개발을 통하여 개도국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술과 정책적 노하우를 세계적으로 전파할 기회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함

김지호 연구원

물류·해사산업연구본부 해사산업연구실
(jiho@kmi.re.kr / 051-797-4662)

참고 자료

- a) MEPC 80/WP.6
- b) ISWG-GHG15/3/9 (대한민국)